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 정 호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9월 26일 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90대 총리로 선출됨으로서 새로운 아베내각이 발족하였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해 나갈지 한국, 중국 등 역내 국가는 물론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중시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일동맹의 강화 된 틀을 기반으로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동아시아 외교의 틀 내에서 대한반도 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1. 아베 정권의 대한정책

아베 총리는 역사 인식에 있어 애매모호함으로 일관해 오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애매모호함이 지속되는 한,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지지기반인 보수 진영을 의식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 양국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와는 달리, 독단·독선적이지 않고,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총리로서 주변 측근들과 협의아래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외교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일관계도 개선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총재 경선 과정에서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다니가키 사다카즈 후보와의 논쟁에서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반성한 1995년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 담화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9월 22일의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아베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 및 중국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합의문을 연립정권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관계 개선을 주장해 온 공명당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아베 총리도 개인적으로는 친한파 정치인이었던 부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장관의 영향, 한국과의 인맥 등으로 한국에 우호적 정서를 갖고 있고, 아울러 퍼스트레이디 아베 아키에 부인도 한국에 매우 우호적 정서를 지닌 열렬한 '한류 팬'이다. 일반적 일본 여성과는 달리, 개성이 강하고 담대한 아베 아키에 부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는 한·일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보수성향의 정치인으로서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에 최역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사와 맞물린 ‘일본 대 한국·중국’간의 갈등이 증폭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한·일관계의 개선을 낙관적으로만 전망·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외교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지만, ‘강한 일본’을 위한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의 개정은 한·일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아베 총리의 등장과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한·일 양국의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의 여부에 따라, 한·일관계는 관계개선을 향해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2.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정치화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하였다. 또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외교문제 등으로 후쿠다 야스히로 전 관방장관의 추격을 받는 중 2006년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차기 총재·총리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이처럼 아베 총리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정치지도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시하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듯한 조치를 인사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즉, 최측근으로 내각의 제2인자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으로 하여금 납치담당 특명장관을 겸직하도록 하였고, 재무성 출신의 나카야마 교오꼬 내각참여를 납치담당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이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겸 납치담당 특명장관의 지휘아래 나카야마 교오꼬 납치담당 총리보좌관, 내각부의 납치문제 담당 종합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일 양국의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대북 정책 그룹의 등장에 대해 대북 강경론자의 전면 배치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납치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경제재제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과 압박’전략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것이고, 압박의 강도는 미국의 대북 제재의 강도에 응해서 취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채찍’만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적절히 ‘당근’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